

주간 통일정세

2015-10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북한군 총참모부, 한미훈련 비난...“불세례로 다스릴 것”(3/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2일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전함.
 - 총참모부는 2일 대변인 성명에서 한미연합훈련은 "우리 수뇌부의 제거와 평양점령 목표를 위한 북침핵전쟁연습"이라며 "북침실전연습이 개시된 이상 엄중한 사태를 절대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통신은 전함.
 - 총참모부는 특히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다스릴 유일한 수단은 대화도 평화도 아닌 오직 무자비한 불세례 뿐"이라며 강경 입장을 거듭 피력했으며 또 "단 한발의 도발 불씨라도 튕긴다면 그 즉시 맞받아 타격한다는 것이 우리 혁명무력의 드팀없는 입장"이라며 북한의 영토·영공·영해에 대한 사소한 침입에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힘.
- 북한 조평통, 한미훈련 비난...“남북대화 기회 지나가”(3/3,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3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며 "북남 대화와 관계개선의 기회는 이미 지나갔으며 오직 힘의 대결에 의한 최후의 결판만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이어 "남조선 괴뢰들이 스스로 북남 대화와 관계개선의 천금 같은 기회를 차버리고 전쟁의 화를 불러들인 후과(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통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이번 한미연합훈련의 목표가 '수뇌부 제거와 평양 점령'이라며 남측이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려는 미국의 '돌격대·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함.
 - 성명은 또 남측이 "전쟁화약고에 불을 질러놓고 탄전을 피우며 대화 타령에 악착을 돌리고 있다"며 남북대화를 촉구한 박근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도 비난함.

- 북한, 이병기 비서실장 임명 비난…“대결광신자”(3/5,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5일 '서기국 보도'에서 국가정보원장 출신을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 "유신독재와 반공화국 모략책동에 더욱 매달리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선포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전함.
 - 성명은 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등이 국정원의 '조작책동'의 결과라며 이 같은 상황에도 남측 당국이 이병기를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며 국정원을 두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이 실장에 대해서는 "배신자·변절자(탈북자 지칭)를 유인매수해 남조선을 끌여가는 놀음을 막후에서 총지휘한 음모가, '남북공동선언에 서명한 남조선 집권자들을 이적으로 모독한 극악한 반통일 대결광신자'라며 강하게 비난함.

- 북한 "김기종 증복몰이는 통일세력 전멸 위한 것"(3/8,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8일 서기국 보도에서 남측이 고의로 김기종을 북한과 연계시키고 있다며 "이는 통일애국 세력을 전멸시키고 반공화국 모략소동에 더욱더 매달리려는 악랄한 기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보도는 한미군사훈련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이번 사건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친미사대, 반통일대결분자들의 망동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박 대통령 3·1절 기념사 실명 맹비난(3/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일 '추악한 사대매국적 정체를 드러낸 기념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박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북핵에 대해 '시비'를 걸었다며 이는 "체제대결의 망상을 실현해보려는 불순한 기도"라고 비난함.
 - 이어 "미국 상전과 결탁해 민족의 머리 위에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고 시치미를 떼면서 기념사에서 3·1운동 정신을 운운한 것은 꾀롭치와 철면피의 극치"라고 험담을 쏟아냄.
 - 통신은 또 박 대통령이 일본에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동반자가 될 것을 촉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에 끼친 최악의 역사를 덮어버린 것"이라고 평가하며

'3·1운동에 대한 우롱', '너절한 친일사대 굴종행위'라고 깎아내림.

- 북한, 한미 연합군사훈련 비난...“파멸의 구렁텅이”(3/4,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조선중앙통신은 4일 '도발자들은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괴뢰들이 합동군사연습에 가담한 것은 침략자들과 함께 파멸의 구렁텅이를 파는 어리석고 미련한 행위"라고 주장함.
 - 노동신문도 4일 '도발자들을 가차없이 징벌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내외 호전광들이 이 땅에서 전쟁의 불집을 터뜨린다면 도발의 본거지들을 재가루만 날리는 황량한 폐허로, 처참한 무덤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함.

- 북한 "남측, 서면 과거사 발언 두둔...가련하다" 비야냥(3/5,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5일 '미국에는 말 한 마디 못하는 주제에 동족에게는'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서면 차관의 발언에 대해 남측 정부가 '함구무언'하고 있다며 "제 얼굴이 죽탕이 됐는데도 참아야만 하는 괴뢰들의 처지가 가련하다"고 밝힘.
 - 이어 서면 차관의 발언은 한·미·일 3각 군사동맹 구축을 위한 '압박'의 일환이라며 "당국이라면 민심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미국에 똑똑한 항변 한마디라도 해야 옳을 것"이라고 주장함.

- 북한언론, 리퍼트 피습 일제히 보도...“정의의 칼세례”(3/6,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 노동신문은 6일 '전쟁광 미국에 가해진 응당한 징벌'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을 전하며 김기중의 공격을 '정의의 칼세례'라고 주장함.
 - 이어 "반미 기운이 높아가고 있는 속에 벌어진 이 사건은 남조선에서 위험천만한 합동군사연습을 벌려 놓고 조선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미국을 규탄하는 남녘 민심의 반영이고 항거의 표시"라고 평가함.
 - 이에 앞서 조선중앙통신도 전날 사건 발생 10시간여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응당한 징벌'이라는 내용의 첫 논평을 내왔으며 조선중앙TV도 전날 밤 10시15분 보도에서 피습 사건을 사진과 함께 보도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 관계

- 6·15남·북·해외위 "올해 남북 통일축전 개최할 것"(3/4, 연합뉴스)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는 공동위 결성 10주년인 4일 올해를 '자주 통일의 대통로를 여는 역사적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함.
 - 이들 단체는 이날 발표한 공동결의문에서 "6·15 정신으로 단결한다면 얼마든지 분단의 8·15를 통일의 8·15로 바꿔 나갈 수 있다"며 "올해 남·북·해외의 각 계층 대표들이 모이는 통일대축전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힘.

라. 대남 군사 관계

- 北, 키리졸브 시작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3/2, 연합뉴스)
 - 국방부는 2일 "북한이 오늘 새벽 6시32분부터 6시41분 사이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남포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했다"며 "사거리는 각각 495km, 493km였다"고 밝혔으며 사거리가 500km에 육박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에는 통보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北, 평북 미사일기지서 노동미사일 발사 태세(3/3, 연합뉴스)
 - 북한이 스커드-C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노동미사일을 발사할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3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정부의 한 소식통은 3일 "북한이 평안북도의 한 노동미사일 기지에서 며칠 전부터 이동식 발사차량(TEL) 2대를 전개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안다"면서 "군 당국은 실제 발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 관측하고 있다"고 밝힘.

마. 남북 경제 관계

- 통일부, 인도적 대북지원단체 자격 완화 추진(3/8, 연합뉴스)
 - 통일부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연합뉴스가 8일 밝힘.

- 개정안은 대북지원사업자 요건을 현행 "북한의 상대방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반출한 물품의 사용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에서 "북한의 상대방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반출할 물품의 사용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로 변경했다고 뉴스는 전함.

바. 남북 사회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韓美 '키 리졸브(KR)·독수리(FE)' 합동연습(3.2~4.24) 돌입 관련 "북붕괴설을 내돌리면서 벌어지는 이번 연습은 괴뢰패당이 떠들어온 대화니, 관계개선이니 하는 것은 기만술책에 불과하다"며 "백두산 총대의 조준경안에 들어있다"고 위협(3.2, 중앙통신·민주조선)
- 우리 정부의 '북한의 대화호응 촉구(통일부·국방부 대변인, '북한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부당한 전제조건으로 내걸어서는 안됨' 등)'에 대해 "북남관계 파국책임을 모면하고 북침전쟁 책동을 합리화 하려는 술책"이라고 비난(3.2, 중앙통신·노동신문)
- 남한 대법원의 '자주민보' 폐간 결정에 대해 "겨레를 등지고 통일과 담을 쌓은 민족반역 무리, 반통일 파쇼집단의 정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 지속(3.2, 중앙통신·노동신문)
- 대통령의 3.1절 기념사('北, 핵 포기와 개혁·변화' 등)에 대해 "북남관계가 계속 악화되는 원인"이라며 "대결적 본성을 또다시 드러낸 것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비난 지속(3.5, 중앙통신·민주조선)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북한 외무성, 한미훈련 비난... "강도높게 대응할 것"(3/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2일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남한과 함께 '사회주의 붕괴'를 목적으로 군사훈련을 강행했다며 "그것을 짓부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대응 역시 더욱더 강도 높게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전함.

- 담화는 한미군사훈련을 '아시아태평양 중시 전략에 따른 음흉한 술책'이라며 미국의 대북 압박 탓에 북한이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붕괴' 발언 등을 거론하며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도발적인 반공화국 대결 광증이 불러온 험악한 정세와 분위기로 미뤄볼 때 우발적인 불꽃이 될 수 있는 위험도는 특별히 높다"고 지적함.
- 北 리수용 "필요하면 美 선제타격 가할 힘있어"(3/3, 연합뉴스)
 - 북한 리수용 외무상은 3일(현지시간) "이제는 우리도 미국을 억제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선제타격도 가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3일 전함.
 - 리 외상은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의 적대 정책은 우리를 핵보유로 떠밀었으며, 날로 가중되는 미국의 핵위협은 우리로 하여금 핵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함.
 - 그는 또 "한해에도 몇 차례씩 전략 핵 폭격기가 미국 본토나 괌으로부터 무착륙비행으로 곧장 조선반도 상공에 진입해 핵폭탄을 투입하는 연습을 벌이고 있다"며 "항공모함과 핵미사일 잠수함들이 끊임없이 조선반도 수역에 들어와 '평양점령'을 목표로 한 핵전쟁연습에 참가하고 있다"고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고 뉴스는 전함.
- 북한, 미국 인권공세·경제제재 비난…"총파산 할 것"(3/3, 연합뉴스)
 - 북한의 조선법률가위원회는 3일 미국의 유엔 인권결의안 주도과 대북제재 등을 거론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3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조선법률가위원회는 3일 미국이 "'인권옹호'의 간판 밑에 벌리는 악랄한 반공화국 소동과 세계도처에서 일삼고 있는 고문만행, 비법적인 제재폭동을 폭로한다"며 백서를 발표했으며
 - 백서는 지난해 말 미국의 주도로 채택된 유엔 인권결의안에 대해 "우리(북한)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 체제전복, 무력침공책동이 실천단계에 들어갔다"면서 민족자결권 영역인 인권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고 뉴스는 전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일본 자위대 활동 확대, 침략야망 보인 것"(3/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일본 군국주의 재생의 위험성에 각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일본이 평화국가의 너울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군국주의 국가, 침략국가로서의 정체를 드러내놓고 있다"고 비난함.
 - 신문은 "일본 집권세력이 확대강화된 침략 무력을 믿고서 국가 안전을 구실로 아시아 나라들에 대한 재침 야망을 실현하려 한다"며 이는 아시아를 '메주밟듯 하던 시절'을 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일제의 만행을 생생히 기억하는 아시아 인민들은 쓰라린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일본 군국주의 재생의 위험성에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함.

- 북한 "남은 것은 핵과 핵의 대결뿐"(3/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천만군민의 단호하고 무자비한 보복의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은 것은 불과 불, 핵과 핵의 대결뿐"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남한 정부가 미국의 힘을 빌려 북한을 압살하려는 망상으로 연합군사훈련에 가담했다며 이는 "상진과 함께 과멸의 함정을 파는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라고 비난하는 데 이어 "북남대화과 관계개선의 기회는 여지없이 사라져버렸고 정전협정도 휴지장으로 되어버린 지 오랜 상태"라며 "우리의 군사적 행동은 허세나 위협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라고 강조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특이사항 없음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북한·일본, 납치문제 국장급협의 재개 조율”(3/7, 니혼게이자이)
 - 북한과 일본이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에 관한 국장급 협의를 다시 열고자 조율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7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북한과 일본은 최근 비공식 접촉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 국장급 협의를 여는 것을 목표로 논의 중임.
 - 닛케이는 최근 이어진 비공식 접촉에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관계자가 일본인 유골 문제나 재일 조선인 남편을 따라 북한으로 이주한 일본인 배우자('북송 일본인 처'〈妻〉)에 관해서는 대체적인 조사가 끝났다는 뜻을 전했다고 덧붙임.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남북, 유엔 인권이사회서 北 인권 놓고 격돌(3/4, 연합뉴스)
 - 남북이 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격돌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함.
 - 북한 리수용 외무상은 허위 증언에 기초한 반공화국 결의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우리 정부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법'이라며 북한 당국의 반인도주의적 인권유린 행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고 뉴스는 전함.

- 유엔 인권최고대표 "北인권문제 더욱 잘 조명할 기회"(3/6, 연합뉴스)
 -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5일(현지시간) 이번 28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더욱 잘 조명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6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자이드 인권 최고대표는 5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작성한 연례 인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한 기조연설에서 "지난해 제출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행동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지난해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문제를 보고하기까지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뉴스는 전함.

자. 기타 국가

- 특이사항 없음

- 美 국가안전보장국의 '北, 소니 해킹 지목과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民官 사이버보안 정보교류 강화) 발표'에 대해 '北을 사이버 범죄자로 몰아붙여 보복성 反北 사이버테러 공격을 가하려는 의도'라고 주장(3.2, 중앙통신·민주조선)
- 北 황명철(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실장),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독도문제를 국제화, 정치화하여 독도를 분쟁영토로 만들고 그것을 구실로 조선반도 재침의 길에 나서기 위해서"라고 경종(3.2, 중앙통신)
- 駐北 아세안위원회, 3월 2일 강석주(黨 비서)·박근광(黨 부부장) 등 초청한 가운데 '김정일 생일(2.16)' 즈음 연회 개최(3.2, 중앙통신·중앙방송)
- 양형섭, 3월 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작별 방문한 駐北 라오스대사와 담화(3.3, 중앙통신)
- '美, 아태지역 군사력증강 및 미사일방위체계 구축은 이란과 北 위협을 막기 위한 것' 주장 관련 '큰 나라들이 강하게 도전해 나올 것 같아 우리(北)의 위협설을 쫓고 있다'며 '주변나라들을 얼려 넘기기 위한 기만술책'이라고 주장(3.3, 중앙방송·노동신문)
- 日 '마에하라 세이지' 국회 중의원 의원(민주당)의 「총련」 중앙회관 매각의혹 제기(2.20, 중의원 예산委) 등 관련 '反北 정치적도발로 현재 진행 중인 北日 회담에 찬물을 끼얹을 목적'이라고 비난(3.5, 중앙통신·민주조선)

3. 대내정치

가. 김정은 동향

- 북한, 2009년 장거리로켓 발사 때 조종사 사망 확인(3/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일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부대를 방문해 "광명성 2호기의 성과적 발사를 보장하기 위해 작전에 참가해 위훈을 떨친 14명 전투비행사들의 위훈비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밝힘.
 - 통신은 또 김 제1위원장은 또 이날 부대 군인들과 함께 식수절(3월 2일)을 맞아 직접 삽을 들고 구덩이 파기, 흙다지기 등 나무심기 '모범'을 보이며 산림조성 사업에서 군대가 앞장설 것을 주문했으며 이날 시찰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오일정·한광상 당 부장, 리병철 당 제1부부장, 손철주 공군 정치위원이 수행했다고 전함.

- 북한 김정은, 양로원 건설현장 시찰... "노인 보호해야"(3/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 양로원 건설현장을 시찰했으며 김 제1위원장의 이날 시찰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태복·오수용 노동당 비서, 리재일 당 제1부부장, 조용원·김여정 당 부부장 등이 수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양로원을 잘 꾸리는 것은 당의 연로자 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고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과시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노인의 신체·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편의 시설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통신은 전하면서 "40여일 남짓한 사이에 양로원의 자태가 완연히 드러났다"며 공사 진행 상황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6월 말까지 완공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힘.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북한, 스리랑카 주재 대사에 계춘영 임명(3/5, 조선중앙방송, 연합뉴스)
 - 조선중앙방송은 5일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에게 계춘영 대사가 2월26일 신임장을 봉정했다"고 밝힘.
 - 계 신임 대사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국 북한대표부에서 부대표로 활동, 작년

7월 인도 대사에 임명된 바 있으며 2009년 8월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에 마련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기도 했다고 연합뉴스가 덧붙였다.

- '계급 오락가락' 북한 박정천, 이번엔 소장으로 '뚝'(3/5, 조선중앙TV; 3/8,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체제 들어 중장(별 둘)과 상장(별 셋)을 오르내리던 박정천 부총참모장 겸 화력지휘국장이 최근 소장(별 하나)으로 강등된 사실이 8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함.
 - 조선중앙TV가 지난 5일 방송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공개활동 기록 영화에서 박정천이 소장 계급장을 달고 지난달 23일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뉴스는 전함.
 - 박정천이 지난해 12월 30일 김 제1위원장의 여군 방사포부대 훈련 시찰 보도에서 상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던 점에 비춰 강등 조치는 올해 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다. 공식 행사

- 북한, 식수절 맞아 전국 각지서 쫓겨모임(3/2, 조선중앙방송)
 - 북한에서 2일 식수절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봄철 나무심기의 의지를 다지는 쫓겨모임이 열렸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함.
 - 평양 모란봉 구역에서는 최수동 조선직업총동맹(직총)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근로자들이 쫓겨모임을 열고 국가선물관 주변에 8종 1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으며 만경대 혁명사적지에서는 농업근로자들과 전국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원들의 쫓겨모임이, 중앙양묘장에서는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 일꾼들과 여맹원들의 쫓겨모임이 진행됐음.
 - 쫓겨모임에는 최룡해·최태복·강석주·김평해·곽범기 노동당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 부장, 김용진·리무영·리철만·김덕훈 내각 부총리,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고 방송은 전함.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북한, 한반도 긴장국면 맞아 김정은 군사지도력 부각(3/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백두산 장군의 필승의 기상 천지를 진감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 제1위원장이 "미제를 중국적으로 멸망시킬 단호한 결심을 지니시고 우리 식의 필승의 전법을 완성하신 불세출의 명장"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김 제1위원장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계보를 잇는 "또한 분의 백두산 장군"이라며 그의 "담력과 배짱, 비범한 지략과 영군술"을 치켜세우며 김 제1위원장의 군사적 지도력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춤.
- 북한, '부정부패와의 전쟁' 나서...간부 기강 잡기(3/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유훈 관철에서 일꾼(간부)들은 기수, 전위투사가 되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청렴결백과 배치되는 물욕은 사상적 변질의 첫 걸음"이라고 경고하며 강한 어조로 간부들의 사리사욕 추구를 경계하며 청렴한 생활 태도를 주문함.
 - 신문은 또 "일꾼이 사생활에 지나치게 머리를 쓰게 되면 점차 혁명 과업에 무관심하게 되며 혁명열이 식어지게 돼 결국 일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함.
- 북한, 여성의 날 맞아 체제선전...“여성인권의 꽃밭”(3/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강성국가 건설의 전투장마다 애국 충정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라는 제목의 1면 기사에서 "여성들이 남자들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누려온 행복한 삶은 여성 존중의 대화원을 펼쳐준 절세위인의 사랑"이라고 밝힘.
 - 이어 김일성 주석이 조선민주여성동맹을 창설하고 남녀평등권법을 만들어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했다며 여성에 대한 배려 정책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이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항일혁명이 낳은 조선의 첫 세대 여성혁명가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는 김 제1위원장의 조모 김정숙의 생전 일화를 소개하며 그녀를 '항일 영웅'으로 시사함.

■ 북한, 여성의 날 맞아 "김정은에 충성" 강조(3/8,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는 8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여성의 날 기념 중앙보고회에서 "김정은 동지를 당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해 백두의 눈보라마냥 폭풍쳐 나가자"고 촉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그는 이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증조모인 강반석과 조모인 김정숙을 조선여성운동의 '고귀한 재산'으로 언급하며 현대 여성들도 이들의 투쟁 정신 등을 본받으라는 뜻을 피력함.
- 8일 중앙보고회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진 내각부총리, 한광복 당 부장, 김정임 당 중앙위원회 당역사연구소장 등이
- 노동신문도 이날 1면 사설 '여성들은 당의 호소 따라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싸워나가자'에서 모든 여성은 "원수님과 함께라면 기쁨도 슬픔도 시련도 영광이라는 절대적인 신뢰심과 열화같은 충정"을 지니라고 요구함.

- 김정은 黨 제1비서의 판문점 시찰 3주년 관련 '내외 분열주의 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선군의 총대로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통일 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실 절세위인의 애국의지를 내외에 선언한 민족사적 사변'이었다고 주장(3.3, 중앙방송)
- 전국 행정책임일꾼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대, 3월 3일 리명수혁명사적지와 배개봉속 영지 참관(3.3, 중앙통신)
- '평양정신, 평양속도의 창조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北) 식 사회주의의 위력, 집단주의 위력의 힘있는 과시'라며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은 불굴의 정신력과 완강한 돌격전으로 평양정신, 평양속도 창조를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고 강조(3.4, 중앙통신·노동신문)

4.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후속 조치

- 북한, 외국인 육로관광도 이달 하순 재개(3/5,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해 10월 에볼라 바이러스 유입을 막으려고 중단했던 항공편과 육로를 통한 외국인 관광을 이달 중 모두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5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5일 북·중 접경 지역 중국여행사들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이달 하순부터 단둥(丹東)-신의주, 훈춘(琿春)-나선 등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의 양국 주요 국경 출입국사무소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뉴스는 전함.
- 북한 내각, 산림복구지원 결정서 채택...“역량 총동원”(3/7, 조선중앙통신)
 - 북한 내각이 전 국가적인 산림복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함.
 - 통신은 7일 내각이 최근 “전당·전군·전민이 총동원돼 산림복구 전투를 힘있게 벌이기 위한 결정을 채택해 발표했다”고 전함.
 - 결정서에는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이 산림복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국가계획위원회와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임업성, 농업성 등이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해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됨.
 - 또 산림 보호를 위한 감독통제 사업 등 관리 체계를 세우고 산림부문 과학기술 발전과 군민 협동을 독려함.

다. 경제 상황

- 중국 환경기준 강화에 북한 무연탄 수출 제동(3/4, 중국 매일경제신문)
 - 북한산 석탄의 주요 수입창구인 산둥(山東)성 르자오(日照)항 검역국은 지난달 27일 북한에서 수입된 무연탄을 검사한 결과 수은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해당 화물선으로 운반된 무연탄을 전량 반송조치했다고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이 4일 전함.
 - 중국이 무연탄 검사기준을 강화하면서 중국 해관(세관)이 발표한 올해 1월 무연탄 수입량은 1천678만t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무려 53.2%가 줄었으며 이에 따라 최근 몇 년 동안 베트남과 중국 상대 최대 무연탄 수출국 자리를 다툰 북한도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신문은 전함.

- 북한, 1월 대중 광물 수출 급감…원유 수입 '0'(3/4, 연합뉴스)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1월 중국에 수출한 무연탄 규모는 7천971만 달러(약 874억 원)로, 작년 동기보다 21.5% 감소했으며 지난해 대폭 늘어났던 휴대전화 수입액은 1월에는 272만 달러로, 81.2% 줄었으며 자동차 수입액도 작년 1월보다 47.4% 감소한 384만 달러에 그쳤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함.
 - 북한의 중국산 원유 수입액은 지난 1월에도 '제로'(0)를 기록해 13개월째 '0'에 머물렀으며 이와 관련해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월 말 북중 양국이 "정상적인 무역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혀 대북 원유 공급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해 북한이 고의로 통계 수치를 누락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뉴스는 분석함.

- 유엔 식량농업기구, 북한 '식량부족국가' 재지정(3/6, 미국의소리)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북한을 식량부족국가로 지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6일 보도함.
 - FAO는 5일 공개한 '작황 전망과 식량상황' 보고서에서 올해 10월까지 북한에 필요한 곡물량은 40만 7천t으로 북한은 이중 6.4%에 해당하는 2만 6천200t을 확보했으며 확보분 중 외부지원은 1천700t, 나머지는 모두 수입분이라고 밝혔다고 방송은 전함.

- FAO는 또 "북한은 작년 작황 상황이 정체돼 올해 식량 상황이 전년과 비슷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 대부분이 올해 영양부족을 겪을 것"이라고 함.

라. 대외 경제관계

- 스위스, 북한 아동·임산부에 660만달러 식량지원(3/4, 자유아시아방송)
 - 스위스 정부가 북한 아동·임산부를 위해 660만 달러(약 72억원) 상당의 식량을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지원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함.
 - 스위스의 기부금은 영양강화 식품의 재료인 분유를 구입하는데 사용되며 북한 아동·임산부 약 150만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스위스 정부는 올해 대북지원사업으로 식량지원과 함께 산림농법 전수, 수질개선 설비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함.
- 북한, 러 극동지역 개발 투자 참여키로(3/5, 연합뉴스)
 - 북한이 러시아 극동지역 선진개발특구 구성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조약에 서명했다고 러시아 극동개발부가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5일 전함.
 - 이 조약에는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과 리룡남 북한 대외경제상이 서명했으며 극동개발부는 북한이 극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내에 이같은 형태의 개발 지역을 조성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뉴스는 보도함.

- 평양식료연합기업소(139%)·평양곡산공장(130%)·평양맥주공장(171%)·대동강식료공장(121%), 2월 계획 넘쳐 수행(3.3, 평양방송)
- 제30차 김일성종합대학 과학기술축전, 3.3~6 진행(3.6, 중앙통신)
- 제30차 함경북도 과학기술축전, 청진시에서 진행(3.7, 중앙방송)
- 黨·최고인민회의·내각, 2014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등 322개 단위에 "사회주의경쟁 공동순회우승기" 수여 (3.8, 중앙방송)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북한, 에볼라 차단 격리 조치 사실상 해제(3/3, 신화통신)
 - 신화통신은 3일 평양발 기사에서 북한 국가비상방역위원회가 이날 북한 주재 외국공관과 국제기구 대표처에 공문을 보내 자국이 지정한 아프리카 7개국에서 온 이들을 제외한 모든 입국자의 격리·관찰 조치를 해제한다고 통보했다고 전함.
 - 북한 당국이 앞으로도 입국자에 대해 21일간의 격리·관찰을 계속해 에볼라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로 한 국가는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기니비사우, 세네갈, 말리, 코트디부아르 등 7개국이며 평상시 이들 아프리카 국가에서 북한 방문이 드문 점을 고려하면 북한 당국이 지난 4개월 넘게 유지해온 고강도 방역대책인 입국자 격리조치를 사실상 끝낸 것으로 풀이된다고 통신은 전함.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연락 두절 캐나다 임현수 목사, 북한에 억류"(3/6, 연합뉴스)
 - 지난 1월 말 방북 후 연락이 끊긴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임현수(60) 담임목사가 북한에 구금됐다고 교회 대변인이 5일(현지시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마. 사회 동향

- 특이사항 없음

- 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청소년학생들의 '신천박물관' 참관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일에 한번 평성 ↔신천행 정기여객열차 새로 편성 운행" 시작(3.2,중앙통신)
- 北 교예배우들, 3월 2일 제4차 휘퀘라스교예축전(스페인 휘퀘라스시, 2.26~3.2)에서 최고상인 '금코끼리상' 획득(3.6,중앙통신)
- 北, 마식령스키장 방문을 위해 관광버스 운행(3.7,중앙통신)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미국 "북 도발 중단해야"...브리핑서 '동해' 명칭 사용 (03/03,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항의해 스커드 계열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 상으로 발사한 것과 관련, 즉각적인 도발 중단을 촉구함.
 -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 상으로 발사했다는 보도를 접해서 알고 있다"면서 "이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자 일체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규정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함.
 - 한편, 하프 부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동해(East Sea)'라는 표현을 써 주목되는 바, 미 정부 당국자가 공식 석상에서 동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례적으로, 미 정부는 현재 우리 정부의 '동해·일본해 병기' 요구에도 단일지명 원칙 하에 '일본해(Sea of Japan)'라는 단독표기를 쓰고 있음.

- 북한 "남은 것은 핵과 핵의 대결뿐" (03/06, 연합뉴스)
 - 북한은 최근 시작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거듭 비난하며 가차없이 '징벌'하겠다고 위협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천만군민의 단호하고 무자비한 보복의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은 것은 불과 불, 핵과 핵의 대결뿐"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남한 정부가 미국의 힘을 빌려 북한을 압살하려는 망상으로 연합군사훈련에 가담했다며 이는 "상전과 함께 파멸의 함정을 파는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라고 비난하며, 이어 "북남대화과 관계개선의 기회는 여지없이 사라져버렸고 정전협정도 휴지장으로 되어버린 지 오랜 상태"라며 "우리의 군사적 행동은 허세나 위협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 NPT 발효 45주년...미국, 북한 핵비확산체제 복귀 촉구 (03/06,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핵확산금지조약(NPT) 발효 45주년을 맞아 성명을 내고 추가 핵무기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북한의 NPT 체제 복귀를 촉구함.
 - 이와관련, 케리 장관은 "국제 비핵화 의무를 위반하는 몇몇 국가의 도전을 극복하려면 NPT 회원국이 핵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려는 책임을 나눠야 한다"며 "여러 국가가 추가로 핵개발 문턱(nuclear threshold)을 넘을 경우 국제사회 공통의 안보는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함.
 - 또한, "미국은 북한(DPRK)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와 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이프가드로의 복귀를 이루려 국제 공동체와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나. 미·북 관계

- 케리 美 국무 "북한 수만명이 사실상 노예상태" (03/02,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에서는 수만 명이 사실상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고 김정은은 자신에게 반대하거나 충성하지 않는 사람을 마구 처형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상황을 비판함.
 -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 정부는 수십 년간 굶기거나 고문하고 투옥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을 예속시켜왔으며 수많은 사람이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면서 이같이 밝힘.
 -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이러한 인권 유린행위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태도가 바뀌었고 그 결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도 북한의 인권상황을 회의에 의제로 올려 이를 분명하게 비판했다고 설명함.
- 北 리수용 "필요하면 美 선제타격 가할 힘있어" (03/03, 연합뉴스)
 - 북한 리수용 외무상은 "이제는 우리도 미국을 억제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선제 타격도 가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밝힘.

- 리 외상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의 적대 정책은 우리를 핵보유로 떠밀었으며, 날로 가중되는 미국의 핵위협은 우리로 하여금 핵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함.
 - 그는 또 "한해에도 몇 차례씩 전략 핵 폭격기가 미국 본토나 괌으로부터 무착륙비행으로 곧장 조선반도 상공에 진입해 핵폭탄을 투입하는 연습을 벌이고 있다"며 "항공모함과 핵미사일 잠수함들이 끊임없이 조선반도 수역에 들어와 '평양점령'을 목표로 한 핵전쟁연습에 참가하고 있다"고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했음.
- **힐 전 미차관보 "북한은 표류 중...언젠가는 붕괴" (03/04, 연합뉴스)**
 -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4일 "북한은 사실 표류하고 있다"며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북한은 언젠가는 붕괴한다"고 밝힘.
 - 힐 전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타임스와 세계일보 공동주최로 열린 제21회 미디어 콘퍼런스 강연을 통해 "핵무기 개발 때문에 북한은 친구가 없어지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함.
 - 그는 "미사일·핵프로그램 이런 것 때문에 북한 붕괴가 논의되는데 그것 때문에 제재가 많이 이뤄지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미사일은 전 세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체제 붕괴의 위협이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함.
 - **미 국가정보국장 "북한, 미국 싫어하지만 우리 돈은 좋아해" (03/04, 연합뉴스)**
 -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북한이 미국은 너무 싫어하지만, 우리 돈(달러)은 좋아한다"고 말함.
 - 클래퍼 국장은 이날 미 PBS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에 억류돼 있던 케네스 배와 매튜 토드 밀러의 석방을 위해 지난해 11월 초 방북했던 뒷얘기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만찬 식대 지불을 요구받은 얘기가 나오자 이같이 언급했다.
 - 그는 또 방북 당시 나이 든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과 김영철 정찰총국장과의 대화가 딱딱하고 긴장감 넘쳤던 것과 달리 자신들을 공항으로 안내했던 젊은 북한 관리와의 대화는 온화했으며, 이 관리가 '기회가 있으면 다시 방북할 것이냐고 물었다고 전하면서 만약 북한에 희망이 있다면, 또 변화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젊은 세대들에 의한 것일 것이라고 전망함

- 북한, 리퍼트 피습 "미국에 가해진 응당한 징벌" (03/05, 연합뉴스)
 - 북한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에 대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강행한 미국에 대한 남한 민심의 '징벌'이라고 논평했음.
 - 북한이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발생 10시간 만에 신속하게 논평을 내놓은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전쟁광 미국에 가해진 응당한 징벌'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이 사건은 남조선에서 위험천만한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고 조선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미국을 규탄하는 남녘 민심의 반영이고 항거의 표시"라고 주장했다.
 - 중앙통신은 이번 사건의 범인 김기종 씨가 "리퍼트에게 불의에 달려들어 남북은 통일돼야 한다, 전쟁을 반대한다고 외치며 그에게 정의의 칼 세례를 안겼다"고 강조하며, "괴뢰경찰에 연행돼 끌려가면서도 그는 전쟁 반대와 미국-남조선 합동군사훈련 반대 구호를 계속 외쳤다"며 김 씨의 한미 군사훈련 중단 요구에 초점을 맞추었음.

- 북한 매체, 힐 '북한 붕괴' 발언 원색 비난 (03/07,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붕괴? 최종과멸을 당할 자들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힐 전 차관보의 발언을 언급하며 "날강도 명수들의 황당한 궤변이고 발악의 발로"라고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북한 붕괴' 발언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음.
 - 우리민족끼리는 힐 전 차관보가 북한의 현실을 모르고 있다며 "북한은 정치사상 강국, 군사강국으로 그 위용을 만방에 과시하고 있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린다"고 강변했음.
 - 이어 힐 전 차관보를 '능력 부재와 가치상실로 시골 뒷골방에 처박혔던 늑다리 송장', '늑다리 승냥이'라고 헐뜯으며 "미국이 사라지는 그때 백악관 오바마, 시골구석의 힐의 악담질도 더는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함.

다. 중·북 관계

- "북중관계 개선, 오히려 북한이 외면" (03/02, 연합뉴스)
 - 얼어붙은 북중 관계를 복원하는 데 대해 중국보다는 오히려 북한이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음.

- 북중 관계에 밝은 베이징의 소식통은 "(고위급 인사교류 등) 최근 양측 사이에 나타난 변화는 없다"며 "생각보다 중국 쪽에서 북한을 좀 포용하고 싶어하는데 의외로 북한이 중국을 상대하려 하지 않는 상태인 것 같다"고 말했으며, 또 중국 역시 북한에 관계개선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원칙을 바꾸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 소식통은 특히 "북한의 에블라에 대한 대책이 워낙 엄격해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하고도 인사교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방북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3주간 격리되는데 누가 가려 하겠느냐"고 덧붙였다.

■ 중국, 북한 미사일 발사에 "예의주시" (03/02,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에 맞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데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관련국에 자제를 촉구함.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해당 보도와 관련국의 반응을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중국은 관련 동향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함.
- 그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은 관련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동시에 관련국의 공동 책임"이라면서 "우리는 현 정세에서 각 당사국이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안정을 수호하길 희망한다"고 밝힘.

■ 북한, 1월 대중 광물 수출 급감…원유 수입 '0'(종합) (03/04, 연합뉴스)

- 올해 1월 중국에 대한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 규모가 작년 1월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4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1월 중국에 수출한 무연탄 규모는 7천971만 달러(약 874억 원)로, 작년 동기보다 21.5% 감소하였고, 무연탄은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임.
- 북한의 중국산 원유 수입액은 지난 1월에도 '제로'(0)를 기록해 13개월째 '0'에 머물렀는데, 이와 관련해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월 말 북중 양국이 "정상적인 무역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혀 대북 원유 공급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하여, 중국이 북한에 원유 공급을 계속하면서도 고의로

통계 수치를 누락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

■ 중국 외교부장,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 시사 (03/08, 연합뉴스)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8일 북한과 중국의 정상회담 문제와 관련해 "양측의 편리한 시기가 언제인지 봐야 한다"며 성사 가능성을 시사했음.
- 왕 부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인 이날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연합뉴스 질문에 "중북 관계는 기초가 매우 튼튼하기 때문에 특정 시기와 개별적인 일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며 받을 수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이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관계없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김 제1위원장의 만남이 적절한 시기에 추진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됨.

라. 일·북 관계

■ 일본,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에 "엄중 항의" (03/02,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2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확보 관점에서 극히 문제가 있다며 북한에 엄중히 항의한다고 발표함.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한국, 미국 등과 공조해 정보수집과 분석에 나설 것을 각 부처에 지시함.
-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6시30분께 북한 서해안에서 탄도 미사일 2발이 동해로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북한 "일본 자위대 활동 확대, 침략야망 보인 것" (03/06, 연합뉴스)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일본의 자위대 활동범위 확대 시도에 대해 '일본 군국주의 재생의 위험성에 각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일본이 평화국가의 너울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군국주의 국가, 침략국가로서의 정체를 드러내 놓고 있다"고 비난함.
- 신문은 "일본 집권세력이 확대강화된 침략 무력을 믿고서 국가 안전을 구실로 아시아 나라들에 대한 재침 야망을 실현하려 한다"며 이는 아시아를 '메주끓듯

하던 시절'을 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또한, 이어 자위대의 작전능력이 고도로 높아지고 장비도 공격을 목적으로 현대화됐다고 평가하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 "북한·일본, 납치문제 국장급협의 재개 조율" (03/07, 연합뉴스)

- 북한과 일본이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에 관한 국장급 협의를 다시 열고자 조율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북한과 일본은 최근 비공식 접촉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 국장급 협의를 여는 것을 목표로 논의 중으로, 일본 정부가 납치문제 재조사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고 있고 북한 측의 태도에 따라 공식협의 재개 여부와 시기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 협이가 재개되면 북한 측은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 대사나 특별 조사위원회 관계자가, 일본 측은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이 대표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마. 러·북 관계

■ 북한, 러 극동지역 개발 투자 참여키로 (03/05, 연합뉴스)

- 북한이 러시아 극동지역 선진개발특구 조성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조약에 서명했다고 러시아 극동개발부가 밝혔다.
- 이 조약에는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과 리룡남 북한 대외경제상이 서명하였으며, 극동개발부는 북한이 극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내에 이같은 형태의 개발 지역을 조성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음.
- 한편, 극동 개발특구는 기업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특별 입법을 통해 경제·사회적으로 선진화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극동개발부는 지금까지 극동 14개 지역에 걸쳐 18개 투자 계획을 선정했으며 향후 수년간 16억 달러(1조7천614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다는 계획임.

- 북한 리수용 외무상, 8~12일 벨라루스 방문 (03/05, 연합뉴스)
 -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오는 8~12일 벨라루스를 공식 방문한다고 러시아의 소리 방송이 5일 벨라루스 외교부를 인용해 보도함.
 - 드미트리 미론치크 외교부 대변인에 따르면 리 외무상은 방문 기간 블라디미르 마케이 벨라루스 외무장관을 만나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짐.
 - 특히 정치, 경제·무역, 교육, 보건 분야 협력에 집중할 예정이며, 아울러 현지 기업인을 만나고 수도 민스크와 인근 문화역사지를 탐방할 예정임.

바. 기타

- 유엔 인권이사회 개막…남북, 北 인권 놓고 격돌 (03/02, 연합뉴스)
 - 북한과 미얀마, 팔레스타인, 시리아 등의 인권문제를 다룰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2일(현지시간) 오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개막함.
 -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는 특히 우리 정부의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이 3일 오후 회의 기조연설에서 지난해 유엔총회가 결의로 권고한 책임 규명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 차원의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임.
 - 이에 앞서 북한 리수용 외무상도 3일 오후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책임자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을 골자로 한 유엔 총회 대북 인권결의안을 비판하면서 탈북자 신동혁 씨의 자서전 증언 내용 일부 오류 인정 등을 사례로 들며 인권결의안의 무효화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짐.
- 유엔 인권최고대표 "北인권문제 더욱 잘 조명할 기회" (03/06, 연합뉴스)
 -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이번 28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더욱 잘 조명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힘.
 - 자이드 인권 최고대표는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작성한 연례 인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한 기조연설에서 "지난해 제출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행동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지난해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문제를 보고하기까지 했다"면서 이같이 말하였음.
 - 특히, 자이드 대표는 "회원국들이 전례 없이 북한 인권문제 개선과 반인도적

범죄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결의안까지 내놓았다"면서 "일단 북한이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 인권시스템에 협력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을 환영한다"고 말함.

-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도 '北인권 ICC회부' 포함될 듯 (03/07, 연합뉴스)
 - 유엔총회에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안에도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갈 것으로 보임.
 -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3월2~27일)가 진행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 등이 조만간 이런 내용이 포함된 북한 인권 결의안을 관련국에 회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밝힘.
 - 지난해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안보리가 ICC 회부를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갔고,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에서 '국제사법 메커니즘'으로 표현된 것을 ICC로 명시하여 이에 따라 EU가 이번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결의안에도 'ICC 회부'가 명확하게 들어갈 것으로 판단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미국무부까지 퍼진 日논리…한국외교 다시 시험대 (03/03,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가 일본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무라야마·고노담화의 중요성을 재강조 하면서 웬디 셔먼 정무담당 차관의 발언 파문 수습을 시도하고 있음.
 - 그러나 이번 셔먼 발언 파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미국 외교당국의 인식의 일단을 보여줬고, 이를 개선하고 일본의 역사인식 왜곡 로비를 차단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외교 과제로 다시 부상했다는 점을 확인한 계기가 되었음.
 - 한편, 미국 국무부에서 동북아 지역을 담당하는 대니얼 러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해 말 한일관계 개선이 내년도 미국의 우선순위 정책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미국의 한일관계 개선 목표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한미일 3각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는 바, 셔먼의 문제 발언이 미국의 조급함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임.

- 외교부 “한미,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 공유 확인” (03/03, 연합뉴스)
 - 정부는 미국 국무부가 웬디 셔먼 정무 차관의 '과거사 문제' 발언과 관련, 논평을 통해 무라야마·고노담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재촉 구한 것에 대해 "군 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미가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의회 및 행정부는 2007년 미국 의회 결의안을 포함해 그간 여러 계기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표명해왔으며 우리 정부는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경주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평가했음.
 - 한편, 셔먼 차관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한 세미나에서 한중일 간 과거사 문제와 관련, "민족감정은 여전히 악용될 수 있고,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 미 국무부 “한미동맹 변함없어…북한 지독할 만큼 냉혈적” (03/04, 연합뉴스)
 -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피습 사건과 관련, "한미동맹은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공고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불변을 거듭 강조함.
 -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다른 고위 관리들이 리퍼트 대사에게 전화하거나 직접 병문안을 간 것은 한미동맹의 강도와 깊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번 끔찍한 상황(사건)에도 한미동맹은 바뀌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강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함.
 - 한편 리퍼트 대사의 상태에 대해 "심각한 부상에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다음 주 화요일 또는 수요일까지는 병원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 참가 美해군 함정 5척 입항 (03/05, 연합뉴스)
 -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한미 연합 독수리(FE)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미 해군 함정 5척이 한국에 도착하였음.
 - 한미연합사령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독수리 연습에 참가하는 미 7함대 소속 함정 5척이 어제와 오늘 국내 해군 군항에 차례로 입항했다"며 "이번에 입항한

함정은 한미 해군 장병에게 안보 협력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미사일 장착 이지스 구축함인 마이클 머피함(9천200t)과 존 매케인함(9천200t 급), 연안전투함(LCS)인 포트워스호(3천t)는 평택항에 입항하였으며, 연안전투함의 독수리 연습 참가는 이번이 처음임.

■ 미국무 "몰상식한 공격...리퍼트 돌본 한국인들 감사" (03/05,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에 대해 "몰상식한 공격"(senseless attack)이라고 비난하며 리퍼트 대사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인들에 감사하다고 밝힘.
- 케리 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오늘 발생한 몰상식한 공격 이후 리퍼트 대사와 그의 가족에 위로를 전한다"며 "리퍼트 대사를 돌봐주고 쾌유를 기원해주는 한국인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힘.
- 한편, 미 국무부는 피습 사건 수사를 위해 주한 미국 대사관과 한국 사법 당국이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음.

■ 차대통령, 리퍼트에 위로전화 "한미동맹 부정적영향 없게할 것" (03/05, 연합뉴스)

- 중동4개국 순방차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흥기 습격을 당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의 뜻을 전달했음.
- 박 대통령은 UAE 현지시간으로 오후 2시20분께 전화통화를 해 5분간 리퍼트 대사와 대화를 나누며 "이번 사건이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할 것"이라며 "리퍼트 대사의 조속한 쾌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음.
- 또한 박 대통령은 "이러한 폭력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신속한 수사를 포함, 필요한 조치를 엄정히 취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함.

■ 靑 긴급NSC... "한미동맹 굳건 재확인, 美와 긴밀협력" (03/05, 연합뉴스)

- 청와대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 사건과 관련, "정부는 이번 사건이 리퍼트 대사에 대한 공격일뿐 아니라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굳건한 한미동맹은 추호의 흔들림이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힘.
- 청와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

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협의한 결과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한미) 동맹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회의에서는 이번 사건 범인의 지금까지의 반미·중북 행적 여부 및 그간의 활동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배후세력 존재 여부 등의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번 사건처럼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 등에 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결정했음.

■ 차대통령 "백주대낮 美대사 테러, 충격적이고 있을수없는 일" (03/06,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에서 백주 대낮에 미국 대사가 테러를 당했다는 것은 우리 정부와 국민에 충격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힘.
- 중동4개국 순방차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전날 정상 외교 일정 등을 끝난 뒤 수행 중인 수석비서관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민경욱 대변인이 전했다.
- 박 대통령은 "이번에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반미와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 극단적인 주장과 행동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대다수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한미연합사령관, "美대사, 하루빨리 업무복귀 희망해" (03/06, 연합뉴스)

-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입원 중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방금 대사를 만났고 심신이 굉장히 안정된 상태"라고 전함.
- 또한,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기자들에게 "현재 한미연합훈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소개하였음.
- 한편, 그는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KR) 연습 현장을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훈련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미국 전문가들 "극단주의자 돌출행동...한미관계 영향 없을 듯" (03/06, 연합뉴스)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이 '극단주의자의 돌출적 행동'이라는 시각을 보이면서 한·미 외교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하며, 오히려 한·미 합동훈련에 반대하는 북한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면서 오히려 양국 동맹관계가 강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음.
 -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날 연합뉴스에 논평을 보내 "이번 사건은 한·미 관계를 균열시키려는 북한과 남한 내 세력의 주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야만적이고 비겁한 행동의 결과로 오히려 동맹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함.
 - 또한, 캠벨 차관보는 "우리는 지금 한국 국민의 온정과 선의를 느끼고 있으며 이것은 양국의 애정과 신뢰를 깊게 만든다"며 "리퍼트 대사는 앞으로 비범한 주한 대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 보수언론 서먼 질타... "값싼 박수 받으려는 쪽은 당신" (03/08, 연합뉴스)
 - 미국 보수언론조차 웬디 서먼 국무부 정무차관의 과거사 인식과 '값싼 박수'(cheap applause)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식통에 따르면 보수 성향 주간지 위클리 스탠더드의 편집위원인 이선 엡스타인은 최근 '웬디 서먼 대(對) 한국 - 미국 고위 당국자, 쓸데없이 동맹을 모욕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서먼 차관의 시각을 꼬집었음.
 - 엡스타인은 "서먼 차관이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한국과 일본 간 결고려운 관계를 주제로 의견을 늘어놓으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말을 했다"며 서먼 차관이 지난달 27일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세미나에서 한 발언을 소개하였음.

- 정의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결의안 중요...북핵 폐기하는 길" (03/08, 연합뉴스)
 - 정의화 국회의장은 7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통일이야말로 북핵을 폐기하는 궁극적인 길이며 이를 위해 한층 심화된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정 의장은 이날 미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홈페이지에 올린 연설문에서 한국 국회와 미 의회의 '동북아 100년 평화와 한반도 평화통일 결의안' 공동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음.
 - 연설문의 내용으로는 "올해는 태평양 전쟁이 끝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자

한국은 광복 70주년을 맞는 해"라며 "한국은 한국전쟁 기간을 제외하면 지난 70년의 상대적 안정과 평화 속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국가로 성장했고 일본과 중국 역시 번갈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됐다"고 평가했음.

- 한민구, 美 국방장관에게 서신...“한미동맹 더욱 발전” (03/08, 연합뉴스)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에도 한미동맹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취지의 서신을 지난 6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국방부가 밝힘.
 - 한 장관은 서신에서 "리퍼트 대사의 피습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국 국민 또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고 있다"고 밝힘.
 - 그는 "한미동맹은 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으며 앞으로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카터) 장관과 직접 만나 한미동맹, 지역안보, 세계안보에 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음.

나. 한·중 관계

- 中 상무부장, “한·중·일 FTA 가속 추진하겠다” (03/07, 연합뉴스)
 -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은 한·중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올해 서명이 되면 이를 기초로 한·중·일 FTA를 가속 추진하겠다고 밝힘.
 - 신화통신에 따르면 가오 부장은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자회견에서 한·중 양국의 FTA는 지난 2월말 타결을 발표했으며 환경, 표준, 노동 등 새로운 문제 뿐아니라 무역, 투자, 금융, 통신, 인적교류 등에서 높은 수준으로 균형을 이뤘다면서 이같이 강조함.
 - 가오 부장은 올해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의 FTA 협상이 주요 업무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FTA 협상이 해외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신경계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힘.

다. 한·일 관계

- 일본 아사히 사설 "한일, 운동주 생각하며 점점찾자" (03/02, 연합뉴스)
 - 일본 아사히(朝日) 신문은 2일자 통단 사설을 통해 70년전 일본에서 옥사한 운동주 (1917~1945) 시인을 소개하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쌍방의 노력을 촉구함.
 - '비극적인 시인의 마음을 가슴에'라는 제목의 이 사설은 윤 시인의 대표작 '서시' 일부를 소개한 뒤 "한국병합 100년(2010년)에 맞춰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 담화가 보여준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식민지 지배에 의해 나라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이 손상됐다"고 밝힘.
 - 이어 사설은 "그런 반면 국교 체결(1965년) 후 여러 경제협력 등으로 일본은 한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소개하고 "일본 측이 이런 최근의 행보에 관심을 편중시키고, 한국 측은 지배당한 과거에만 집착하면 점점 발전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일본 관방장관 "위안부 문제 해결" 거듭 주장 (03/02, 연합뉴스)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조기 해결을 일본에 촉구한 데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거듭 밝힘.
 -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회견에서 "(그동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입장을 수없이 한국에 전달해 왔으며 이러한 입장을 한국이 확실히 받아들여도 외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함.
 - 그는 앞으로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일본은 (한일 간에) 개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욱 양국의 지도자를 비롯한 고위 정치 레벨의 대화를 중시하고 있다. 대국적인 관점에서 중층적인 미래지향의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기존 답변을 되풀이했음

- 일본 역사연구자, '강제동원 조선인 사망자 명부' 발간 (03/02, 연합뉴스)
 - 조선인 강제징용 문제에 천착해온 현대사 연구자 다케우치 야스토(58·竹内康人) 씨는 '전시(戰時) 조선인 강제노동 조사자료집-연행처 일람·전국지도·사망자 명부(267쪽·고베학생청년센터 출판사)'를 1월 말 발간함.

- 이 책에는 '국가총동원법'에 따른 일제의 조선인 강제연행이 이뤄진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각지로 끌려가 현지에서 사망한 조선 출신 군인·군속·근로자 등 1만 450여 명의 명부가 담겼음.
- 다케우치 씨는 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명부를 펴냈다고 소개하며, "수교 50주년인 올해 야말로 전쟁 피해자들의 존엄과 권리가 회복되는 형태로 일본과 한국 사이에 새로운 합의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에 대해 지금까지 파악한 범위에서나마 피해자 이름, 강제동원 기업과 장소 등을 적시한 책을냄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기대했다"고 말했음.
- 일본 아베 총리, "나는 역사 수정주의자 아니다" 주장 (03/03,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올해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와 관련해 "나는 역사 수정주의자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음.
 -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이 그간 언급한 바 있는 "전후(戰後) 체제로부터의 탈각(脫却)"이라는 단어가 해외에서 일종의 오해를 낳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하며 전후 체제 탈각이 "국내 정치에 관해 말한 것이며 전후 체제에 도전하는 부류의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임.
 - 한편, 아베 총리는 작년 3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했을 때 "전후 체제에서 탈각해 70년이 지난 지금의 세계정세에 맞춰 새롭게 생기 넘치는 일본을 만들어 가고 싶다"고 말했으며 일본 헌법이 '짐령군'의 손에 만들어졌다고도 언급했음.
- 일본 요미우리 산케이 "촛대통령이 대일기조 바꿔야" 주장 (03/03, 연합뉴스)
 - 일본의 보수지인 요미우리와 산케이 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소재로 한 3일 자 사설에서 박 대통령이 대(對) 일본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함.
 - 요미우리 신문은 사설에서 박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역사문제에서 일본 측에 일방적으로 양보를 요구하는 자세는 변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뒤 "일한관계를 개선할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며 지적함.
 - 산케이 신문도 사설에서 '한일이 보다 성숙한 미래 50년의 동반자가 돼 새 역사를 함께 써나가야 할 때'라는 박 대통령 기념사 내용에 대해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역사 문제에서 일본 측에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전제를 두지

말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의 정상회담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

- 아베, 20년전 무라야마담화보다 약한 국회결의도 거부 (03/04,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소장파 의원시절인 1995년,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 면에서 무라야마(村山) 담화보다 훨씬 강도가 약한 국회결의안을 거부했다고 아사히신문이 4일 소개함.
 - 아베 총리가 여름에 발표할 전후(戰後) 70주년 담화 내용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아사히는 전후 50주년 담화(무라야마 담화)와 60주년 담화(고이즈미 담화)의 작성 경위와 그 당시 아베 총리의 입장 등을 소개하는 특집 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되짚었음.
 - 결의안은 '식민지 지배', '침략적 행위' 등 표현을 담았지만 그에 대한 사죄 문구는 없었음에도 아베 총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결 불참을 통해 표현하였음.

-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한국과 기본가치 공유' 표현 삭제 (03/04, 연합뉴스)
 - 일본 외무성은 외무성 홈페이지의 '최근의 일한관계' 항목에서 '우리나라(일본)와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종전 한국 소개 문구가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최근 대체된 것으로 3일 확인됨.
 - 외무성의 한국 관련 기술 변경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시정방침 연설 내용의 변화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아베 총리는 2013년 2월과 작년 1월 연설 때 한국에 대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각각 규정했지만 올해 2월 연설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만 칭하였음.
 - 이와 관련, 아사히 신문은 "'최근 자주 쓰는 표현에 맞췄다'는 것이 외무성 측 설명이지만 한국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 아베 일본 총리, "헌법, 시대에 맞지 않는 조문도...바꿔야" (03/06,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헌법이 만들어지고 많은 세월이 지나 시대에 맞지 않게 된 조문도 있을 것"이라며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언급함.
 - 그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오사카 세이지(逢坂誠二) 민주당 의원이 총리

스스로 헌법을 깎아내릴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지적하며 견해를 묻자 "나는 총리로서 헌법을 준수·옹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함.

- 아베 총리는 또 헌법이 "점령하에 짧은 기간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현행 헌법은 점령군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니 이제 일본인의 손으로 직접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재차 피력하였음.

■ 일본 '문관 우위규정' 폐지...자위대 운용 일원화 (03/06,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6일 방위관료(문관·'양복조')와 자위관(무관·'제복조')이 대등한 입장에서 방위상을 보좌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방위성설치법 개정안을 마련했음.
- 이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문관이 제복조 자위관을 통제하는 '문민 통제' 원칙이 유명무실해져 제복조가 독주할 때 이를 견제하기 쉽지 않을 것이 우려됨.
-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문관과 제복조 자위관이 분담해온 자위대 부대운용(작전)을 자위관 주체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음.

■ 일본 NHK회장 "고노담화는 국가 방침 아니다" 궤변 (03/06, 연합뉴스)

- 일본 공영방송인 NHK의 모미이 가쓰토(인<米+ 刃>井勝人) 회장이 올 초 사내 회의에서 군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가 정부 공식 방침이 아니라고 발언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함.
- 모미이 회장은 지난 1월9일 국제방송프로그램 심의회에서 국제 프로그램과 관련한 NHK의 구체적인 방침이 없다고 지적한 뒤 "아베 총리가 '아베담화(전후 70주년 담화)'를 내면 이는 국가의 정책(방침)이지만 고노담화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고노담화는 군위안부 제도의 강제성과 일본군의 관여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을 담았음. 이는 무라야마(村山) 담화(1995년 전후 50주년 담화)와 함께 과거사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대표적인 발표물로 꼽힘.

- 일본군 위안부 협상 속도낼까...日, 자체안 제시 (03/08, 연합뉴스)
 - 한일 양국이 이번 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6차 국장급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이 지난 5차 협의에서 구체적인 자국안을 제시한 것으로 8일 알려짐.
 - 한국이 일본에 법적 책임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 문제는 끝났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일본은 과거 아시아여성기금 등을 거론하면서 과거에 이미 사과와 보상을 했는데 또 하라는 것이냐는 말을 하기도 했으며 우리측에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및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평화비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짐.
 - 정부 내에서는 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총리 사과 등의 내용이 담긴 '사사예안'보다 좀 더 진전된 내용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며, 일본 정부 예산을 통한 배상 등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는 형식이 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짐.

- 무라야마 "식민지배·침략 빠지면 담화 의미없다" (03/08, 연합뉴스)
 -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는 1995년 전후 50주년 담화(무라야마 담화)를 낼 당시 담화에 '식민지배'와 '침략' 등 표현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함으로써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우회적으로 비판함.
 - 무라야마 전 총리는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인터넷판에 실린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생각으로 담화에 식민지배와 침략을 포함했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 그는 이어 무라야마 담화의 의미에 언급, "중국, 한국 등 관계국에 사과하면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책을 그려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이라는 행위를 함으로써 막대한 손해와 고통을 줬다는 역사적 사실은 그대로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사과해야 할 것은 사과하고, 보상해야 할 것은 보상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줬다"고 덧붙임.

라. 한·러 관계

- "5월 러시아 전승행사 남북관계 개선에 활용할 필요" (03/06, 연합뉴스)
 - 정부가 오는 5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참석이 예상되는 러시아 전승행사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신범식 서울대 교수는 이날 서울 조선포털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통일포럼에서 "한국 입장에서는 이(전승행사)를 남·북·러 삼각 협력을 진전시키고 나아가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계기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5년은 남·북·러 삼각 협력을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꼭 정상회담이 아니더라도 북러 협력의 동력을 남·북·러 삼각 협력으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러시아는 5월 전승행사에 남북한 정상을 동시에 초청했으며 김 제1위원장은 이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검토 중임.

마. 미·중 관계

- 중국, 오바마의 '반테러법' 비판에 발끈 (03/03,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중국이 입법을 추진 중인 반(反)테러법 내용을 비판한 데 대해 "이 입법활동은 완전히 중국의 내정에 속한다"고 반박했음.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의 반테러법 제정은 테러를 예방하고 타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하며, 그는 또 미국의 국가안보국(NSA)과 영국 정보통신본부(GCHQ)의 휴대 전화 가입자정보카드(심카드) 해킹 의혹이 불거진 점을 거론하며 "각 국가가 자신의 정보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對)테러 리즘 법안을 추진하면서 미국 정보통신기업들에 암호키와 비밀번호를 넘기라고 하고 있다"며 "중국이 미국과 계속 사업을 하고 싶다면 그 계획을 바꿔야 하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이 점을 분명히 거론했다"고 말했음.

- 미 태평양육군사령관 "중국 군비확장, 불안 원인 아냐" (03/05, 연합뉴스)
 - 빈센트 브룩스 미 태평양지역 육군사령관이 4일(현지시간) 중국의 급속한 군비 확장에 대해 "도발하는 데 쓰지 않는다면 불안의 원인은 아니다"고 언급함.
 - 브룩스 사령관의 이런 발언은 중국 정부가 올해 국방예산을 10%가량 증액한다고 발표한 직후에 나왔으며,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 싱크탱크 회의에 참석한 뒤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국방비에 투자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과 중국 간 더욱 긴밀한 군사적 교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음.
 - 또한, 이와 관련 '중국의 급속한 발전을 고려하면 군비 확장은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며 "중국이 이를 도발적인 방식으로 이용하지만 않는다면 군비 확장이 불안의 원인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 중국 외교당국자 "2차대전 승전행사에 오바마 초청 예정" (03/06, 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오는 9월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및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초청할 예정이라고 중국 외교 당국자가 밝힘.
 - 청궈핑(程國平)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5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 대표대회(전인대)의 별도 행사에서 중국이 오바마 대통령을 열병식에 참석도록 초청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함.
 - 청 부부장은 "곧 외국과 국제기구 정상에게 열병식 초청장을 보낼 것"이라며 "열병식이 중요한 기념행사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할지는 그의 일정에 달렸다"고 말했음.

- 중국, 美대사 피습에 "불행한 사건, 유감" (03/06,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서울에서 발생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 사건을 '불행한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유감을 표명하였음.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 사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요구받자 "중국은 이런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우리는 한국 측이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하였고, 화 "우리는 리퍼트 대사의 건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 리퍼트 대사의 피습 사건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미국에 가해진 응당한 징벌'이라고 주장한 북한 측의 태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음.

바. 미·일 관계

- "美, 아베폭주 경계하지만 전략상 일본 절실...상황 미묘" (03/02,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여름에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일명 아베 담화)에서 식민지배와 침략을 반성하고 사죄할지 여부는 미국의 압력 여하에 달렸다고 전직 일본 외교관이 분석함.
 - 외무성 중국과장 출신 아사이 모토후미(淺井基文) 전 히로시마평화연구소 소장은 2일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무라야마담화 계승·발전 모임(이하 모임) 기자회견에서 "아베담화의 최대 포인트는 미국"이라며 이같이 주장함.
 - 모임의 공동대표인 아사이 전 소장은 "미국도 아베 정권의 폭주에 큰 경계심을 갖고 있지만 지금 미국으로선 일본이 없으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전략을 짤 수 없을 만큼 일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함.
- 미셸 오바마, 18~20일 방일...이어 캄보디아도 (03/04,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이달 18~20일 일본을 방문한다고 미국 백악관과 일본 외무성이 밝힘.
 - 백악관은 미셸 여사가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출범시킨 '여성에게 교육을'(Let Girls Learn) 이니셔티브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한다고 설명함.
 - 미셸 여사는 방일 기간에 세계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평화봉사단과 일본의 해외협력자원봉사단 간 공조 프로그램을 통해 이에 대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부연하였음.

사. 미·러 관계

- 마러 외무, 제네바서 우크라 휴전 이행 방안 논의 (03/03,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휴전협정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음.

- 케리 장관은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기조연설을 마치고 나서 별도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오전에 만나 시리아, 이슬람국가(IS), 우크라이나, 이란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라브로프 장관에게 우크라이나 내전 종식을 위한 '민스크 평화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밝힘.
- 이에 앞서 라브로프 장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민스크 협정에 따른 우크라이나 휴전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감시하에 중화기들이 철수되는 등 구체적 조치들이 실행되면서 이제 공고화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돈바스와 다른 지역 간의 이동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등 민스크 협정에 따른 의무 조항들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음.

■ 미국, 우크라 사태 관련 대러 제재 1년 더 연장 (03/05, 연합뉴스)

- 오바마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러시아의 크림병합 사태 등과 관련 지난해 3월과 12월에 취한 대러 제재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백악관 공보실이 전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대외 정책과 안보에 대한 비정상적인 위협이 존재한다"면서 "이같은 위협은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고 평화와 안정, 주권과 영토 통합성을 위협하는 자들과 그들의 정책으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러시아를 지목하며 "이 모든 제재들이 올해 3월 이후에도 지속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대러 제재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힘.
- 미국은 지난해 3월 6일과 16일, 20일 그리고 12월 19일 등 네 차례에 걸친 대러 제재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관된 공직자와 기업인, 기업 등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고 입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음.

■ 미국 사령관 "우크리에 러시아 병력 1만2천명 주둔" (03/05, 연합뉴스)

-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4일 유럽주둔 호지스 사령관이 싱크탱크 독일외교위원회가 베를린에서 개최한 모임의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 러시아 군인 1만2천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함.
- 그는 러시아가 작년에 합병한 크림반도에 군인 2만9천명을 추가로 배치하는 한편 분리주의자들이 열세를 보이는 우크라이나와의 국경 지역에 5만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하였음.

- 한편, 러시아는 그동안 수차례 병력과 무기를 제공하면서 반군을 지원 또는 지휘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서방국가들의 지적을 부인했음.
- 미국 하원의원들, 살상용무기 우크라이나 지원 촉구 (03/06, 연합뉴스)
 -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비롯해 미 공화당과 민주당 하원 의원 11명이 5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방어 무기를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함.
 - 이들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행동은 "서방에 대한 도전이자 2차 대전 후 막대한 비용으로 확립된 세계 질서에 대한 공격"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촉구했음.
 - 이들은 지난달 휴전으로 연결된 이른바 민스크 평화협정도 러시아와 분리주의자들의 이익만 강화했다면서 "살상용 방어 무기 지원을 비롯해 우크라이나의 영토 수호 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즉각 승인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하며, 살상용 무기 지원만이 우크라이나가 추가적인 공격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함.

아. 중·일 관계

- 중국 정협 대변인, 아베 총리 역사인식 직설 비난 (03/02, 연합뉴스)
 - 올해 2차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일본에 대한 역사공세 수위를 점차 끌어올리는 중국 당국이 공개석상에서 다시 한 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역사 인식을 직설적으로 비난함.
 - 뤄신화(呂新華)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대변인은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하루 앞둔 2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일본에 진정한 역사반성을 촉구함.
 - 그는 '종전 70주년과 일본지도자의 입장 표명'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과거 종전 50주년, 60주년을 즈음해 일본의 전 지도자들은 무라야마 담화, 고이즈미 담화를 발표했다"며 "(일본 지도자가 다시) 70년 전 그 침략전쟁이 중국과 아시아 각국에 준 재난에 관한 태도를 밝히는 것은 평화발전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 중국 "역사는 거울, 국제사회 공동인식" (03/02,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한·중·일간 과거사 갈등과 관련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의 '양비양시론'적 언급과 관련, "역사를 새기고 거울로 삼아 공동으로 미래를 열어 나가는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 공동의 인식이 존재한다"고 강조함.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셔먼 정무차관의 언급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요구받자 "미국 관료의 구체적인 발언에 대한 확인이 필요 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역사 문제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이같이 피력했음.
- 화 대변인은 이어 역사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는 고도의 공동인식이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최근 뉴욕에서 주최한 공개토론회에서도 중요한 공동인식에 도달했고 매우 명확한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상기하며, 침략의 과거사를 미화·부정하는 일본의 현직 지도자들을 향해 "올해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70주년이라는 매우 중요한 기회를 맞았다"면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와 미야모토 유지(宮本雄二) 전 주중 일본 대사 등 일본 내부의 양심 있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함.

■ 중국 '2차대전 승전기념 열병식'에 아베총리도 초청할 듯 (03/03, 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올해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및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 행사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초청하겠다는 뜻을 간접 표명하였음.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2차 대전 열병식과 관련해 일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미국에 초청장을 발송했거나 보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앞으로 모든 관련 국가 지도자와 국제기구에 '요청'(초청장)을 보낼 것"이라고 대답했음.
- 화 대변인이 거론한 '관련 국가 지도자'가 어떤 국가를 의미하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 승전국과 일본, 독일 등 패전국, 아시아의 전쟁 피해국 지도자들을 포괄하는 표현으로, 북한 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도 초청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중국, 일어·영어판 '다오위다오 사이트' 개설 (03/04, 연합뉴스)
 - 중국이 지난해 말 영유권 강화 행보 차원에서 개설했던 '다오위다오(釣魚島·센카쿠(尖閣)) 사이트'에 대한 일본어판, 영어판 사이트도 개설되었음.
 - 관영 신화통신은 4일 중국국가해양국을 인용, '다오위다오 사이트' 영어판 (<http://www.diaoyudao.org.cn/en>)과 일어판 (<http://www.diaoyudao.org.cn/jp>) 이 이날 정식 개통됐다고 보도했음.
 - 또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에 사실과 진실을 알리고 중국이 다오위다오에 대해 논쟁할 여지가 없는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중·일 안보대화, 4년만에 19일 도쿄서 개최 (03/05, 연합뉴스)
 - 일본 외무성은 제13회 중·일 안보대화를 이달 19일 도쿄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하였음.
 - 외무성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안전보장정책, 방위정책, 지역 정세 등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며, 일본 측에서는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심의관(차관보급)과 방위성 및 국가안전보장국 관계자가, 중국 측에서는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 조리(차관보급)를 비롯한 외교·국방 당국자가 각각 참석할 예정임.
 - 한편, 1993년 12월 시작된 중·일 안보대화는 2011년 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나서 센카쿠(尖閣·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열도 갈등 등의 영향으로 한동안 중단됐다가 이번에 4년여 만에 재개되는 것임.

- 아베 부인 아키에 여사, 중국대사관 '세계여성의 날' 행사 참석 (03/06,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주일본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아키에 여사는 "중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이 협력해 전 세계에 '여성이 빛나는 사회'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고, 아키에 여사의 이날 행보는 얼어붙은 중일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동시에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여성 정책을 홍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됨.
 - 아키에 여사는 작년 11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부인 평리위안(彭麗媛)

여사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여성을 만나 자극을 받았다고 회고하고 "중일 관계에서 더욱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다"고 밝힘.

- 중국 재정부장 "AIIB, 일본 등 여러나라에 열려 있어" (03/06, 연합뉴스)
 -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AIIB)에 관해 "일본을 포함해 (아시아) 지역 여러 나라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 교도통신에 따르면 러우 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에도 수시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비교적 큰 국가도 참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하며 또한, 그는 유럽의 일부 국가도 참가 의향을 표시한 상황이며 중국은 아시아 국가를 우선해 AIIB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 한편, 중국이 최대 출자국이 될 AIIB는 신흥국의 기반시설 건설 등을 지원하며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 후쿠다 전 총리, 시진핑 주석 면담 예정 (03/07, 연합뉴스)
 -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일본 총리가 이달 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만난다고 NHK가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후쿠다 전 총리는 이달 26~29일 중국 남부의 하이난다오(海南島)에서 열리는 '보아오(博鳌) 아시아 포럼'에 참가할 예정으로 시 주석도 이 행사의 개막식에 참석, 연설을 할 예정이다.
 - 후쿠다 전 총리는 현지 체류 중에 시 주석과 면담할 예정이며, 이번 면담에서 두 사람은 올해가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인 점 등을 고려해 양국 관계나 경제 상황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임.

자.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차. 일·러 관계

- 하토야마 전 총리 크림 방문 검토에 일본 정부 '당혹감' (03/06, 연합뉴스)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 총리가 러시아에 병합된 크림 방문을 추진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당혹감을 드러냈음.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하토야마 전 총리가 러시아에 편입된 우크라이나 남부의 크림 반도를 방문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밝히며, 이와 관련해 기시다 외무상은 하토야마 전 총리가 크림을 방문하면 "러시아에 의한 일방적인 크림 병합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유감"이라고 언급하였음.
 - 그는 외무성이 크림 방문 추진에 관한 정보를 전달 접했으며 러시아 과장이 하토야마 전 총리의 비서관을 만나 크림 방문을 재고하도록 강하게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 국제전략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한, 미국 인권공세·경제제재 비난…“총파산 할 것”(연합뉴스, 3.3)
 - 북한의 조선법률가위원회는 3일 미국의 유엔 인권결의안 주도과 대북제재 등을 거론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위협했음.
 - 조선법률가위원회는 이날 미국이 "'인권옹호'의 간판 밑에 벌리는 악랄한 반공화국 소동과 세계도처에서 일삼고 있는 고문만행, 비법적인 체재폭동을 폭로한다"며 이런 내용의 백서를 발표했다.
 - 백서는 지난해 말 미국의 주도로 채택된 유엔 인권결의안에 대해 "우리(북한)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 체제전복, 무력침공책동이 실천단계에 들어갔다"면서 민족자결권 영역인 인권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비난했음.
 - 이어 "미국이 반공화국 인권 소동을 더욱 악랄하게 벌일수록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도 백배 천배로 강화될 것"이라면서 "범죄적인 체제전복을 노린 미국의 모든 책동은 우리의 강력한 총대에 의해 총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북한 에볼라 차단 조치 4개월...외국인 관광, 대북지원 영향(미국의소리, 3.3)
 - 북한이 에볼라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은 지난해 10월 25일 로, 당시 모든 외국 관광객의 입국을 금지했고 외교관과 국제 구호단체 요원 등 공식 방문객들, 해외출장 후 복귀하는 자국민과 그들의 가족에 대해서도 21일 간 격리돼 의료진의 관찰을 받도록 했음.
 - 외국인 관광객의 북한 입국이 원천봉쇄 되면서 북한전문 여행사들은 4개월 간 개점휴업 상태로 있었음.
 - 구호단체들의 활동도 위축됐는데, 미국의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지난 12월 북한에 지원품을 보내려던 계획을 연기했음.
 -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 WHO는 에볼라 때문에 국경을 통제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보건 전문가들은 북한의 취약한 의료체계로는 에볼라에 대응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며 다만 북한 당국이 매우 효과적으로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에볼라가 발병하더라도 널리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음.

- 북한 김정은, 양로원 건설현장 시찰...“노인 보호해야”(연합뉴스, 3.6)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 양로원 건설현장을 시찰했다고 조선 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음.
 - 평양 양로원 건설은 "사회적으로 돌봐야 할 대상을 보살펴주는 기풍이 사회적 기풍이 돼야 한다"는 김 제1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 김 제1위원장은 "양로원을 잘 꾸리는 것은 당의 연로자 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고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과시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노인의 신체·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편의 시설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음.
 - 이어 "40여일 남짓한 사이에 양로원의 자태가 완연히 드러났다"며 공사 진행 상황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6월 말까지 완공할 것을 지시했음.

- 유엔, 북한 식량 부족국 재지정...부족분 6% 확보(미국의소리, 3.6)
 - 식량농업기구는 5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3월 호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37개 식량부족국가에 포함시켰음.
 - 식량농업기구는 지난해 12월 보고서를 발간했을 때와 비교해 북한의 식량 상황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는데, 지난해 작황이 정체돼 올해 식량 상황이 전년과 비슷할 것이란 지적임.
 - 특히 지난해 가뭄으로 쌀 생산이 전년보다 9% 줄어든 2백60만t에 그쳤다고 지적했음.
 - 한편, FAO는 북한이 지금까지 올해 식량부족 분의 6%를 확보했다고 밝혔는데,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북한이 확보한 곡물은 2만6천2백t으로, 올해 10월까지 필요한 곡물 40만7천t의 6.4%에 해당하는 수치임.

- “국경지역 ‘발자국’으로 탈북 어려워져 눈 녹기 기다려야” 소식통 “발자국 발견된 국경지역 경비대 이동 조치” (데일리NK, 3.6)
 -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탈북 차단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국경 경비대들의 탈북 방조(傍助)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양강도 소식통은 6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최근 (당국은) 국경지역에서

- 눈이 쌓인 곳에 발자국이 발견되면 구역 내 초소 인원이 탈북을 도운 것으로 보고 경비대원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 소식통은 이어 "예전에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중대를 이동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경비대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면서 "이렇게 몇 명이 이동된 경우에는 '사상에 문제가 있다'는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초소 경비대 인원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 북한 당국의 이 같은 방침으로 생계형 '밀수'도 어려워져, 소식통은 "혜산에서 2월 중순에도 눈이 많이 오고 이달 1일에도 눈이 왔다"면서 "지속적으로 눈이 와 발자국이 쉽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경비대와 밀수꾼들은 '당분간 조용히 지내자'라면서 몸을 사리고 있다"고 전했다.
- 북한, 여성의 날 맞아 체제선전...“여성인권의 꽃밭”(연합뉴스, 3.7)
- 북한은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7일 각종 매체를 통해 여성 인권을 부각하며 사회주의 체제 선전에 열을 올렸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강성국가 건설의 전투장마다 애국 충정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라는 제목의 1면 기사에서 "여성들이 남자들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누려온 행복한 삶은 여성 존중의 대화원을 펼쳐준 절세위인의 사랑"이라고 밝혔다.
 - 이어 김일성 주석이 조선민주여성동맹을 창설하고 남녀평등권법을 만들어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했다며 여성에 대한 배려 정책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이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또 군대, 생산현장 등 곳곳에서 일하는 여성의 역할을 소개하며 "자본주의 사회 여성들이 육체도 돈으로 사고팔며 상품으로 전락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들이 나라의 꽃으로 보람찬 삶을 누린다"고 강조했다.

2. 북한 인권

- 美 케리 국무장관 “많은 북한 주민 사실상 노예로 살아가”(조선일보, 3.3)
- 스위스 제네바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노예 상태'라는 표현을 쓰며 강력히 비판했음.

- 케리 장관은 이날 열린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이 사실상 노예 상태로 살고 있다"고 말했는데, 북한에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없고, 정치적 반대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의미임.
 - 케리 장관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자신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처형하고,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숙청하고 있다"며 "북한 정부가 지난 수십년 간 기아와 고문 투옥 등의 방법으로 국민을 예속시켜 왔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 이어 "이런 상황을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며 유엔 인권이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 남북, 북한 인권문제 놓고 유엔서 격돌(미국의소리, 3.4)
- 남북한이 3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의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격돌했음.
 -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를 근거로 한 북한인권 결의안들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 조사 보고서에 다른 탈북자들의 증언이 있지만 그 어느 나라 법정에서도 익명의 증언은 증거로서의 가치를 갖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 아울러 리 외무상은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에 대해 선별성과 이중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끝내야 한다며, 미국 정부의 고문 문제를 긴급 의제로 상정해 그 같은 관행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한국 외교부의 조태열 차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언제까지 주민들의 인권을 짓밟는 비인도적인 행위를 계속할 것이냐고 비판했음.
 - 조 차관은 리 외무상이 누구보다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과 국제사회의 중대한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더 이상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음.
- 네팔, 불법취업 북 근로자 54명 추방(미국의소리, 3.4)
- 네팔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발파작업에 참여했던 북한 근로자 54명이 비자 문제로 결국 전원 추방됐다고 현지 일간지인 '안나푸르나포스트'가 보도했음.
 - 신문은 북한 근로자들이 취업비자가 아니라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지난 1월부터 북부 산간 신두팔축지역 공사 현장에 투입돼 일했다며 이같이

전했음.

- 네팔 보안당국은 북한 노동자들이 불법 고용돼 일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간 뒤 조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근로자들은 곧바로 공사 현장에서 철수했음.
- 이후 북한의 노동자 해외 파견 전문업체가 네팔 이민당국을 상대로 정식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애썼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음.
- 인민군에서 복무할 때 폭발물을 다룬 경험이 있는 화약 전문가들로 알려진 북한 근로자들은 불법으로 취업한 탓에 안전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음.
- 현지 법의 보호를 받는 합법 취업자 신분이 아니다보니 변변한 사전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발파작업 현장에 곧바로 투입된 것임.
-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은 북한이 전 세계 16개국에 5만 명의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다고 추정했음.

■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도 '北인권 ICC회부' 포함될 듯(연합뉴스, 3/7)

- 유엔총회에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안에도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갈 것으로 보임.
-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해 3월 표결을 통해 EU 등이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음.
- EU 등이 제출한 이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반(反)인도범죄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가 '국제사법 메커니즘'에 넘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음.
- 다만 결의안에는 ICC가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으나 지난해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안보리가 ICC 회부를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갔음.
- 또 지난해 12월 유엔총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했다는 점에서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안에는 안보리 차원의 관련 논의를 강하게 독려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됨.

3. 탈북자

- '탈북해도 인신매매...배고파 인분 뒤지기도' 탈북여성 인권 실태 고발(뉴시스, 3.3)
 - 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는 탈북 여성 40여명이 전하는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와 탈북 과정에서 겪은 인신매매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있었음.
 - 뉴코리아여성연합은 이날 '3월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인권탄압 가해자를 처벌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살길을 열어주는 인권법이 하루 빨리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음.
 -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북한 정권도 3월8일을 여성의 날로 지정해놓았지만 북한 여성들의 인권 실태는 세계 최악의 상황"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힘없는 여성들은 북한 독재체제의 희생양으로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 "김정은 정권과 그 추종세력들은 하루 빨리 세계 인권선언의 조항들을 준수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북한 당국은 그들의 행동이 반인륜적인 행위라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세계적인 공조와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비판했음.
 - 뉴코리아여성연합 이소연 대표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가 2만7000명을 넘었고 이 중에 80%가 여성"이라며 "대한민국 사회와 여성단체들이 누구보다 북한 인권개선과 북한 여성들의 인권실현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간곡히 희망한다"고 밝혔음.

- 탈북 학생 작품 미국서 전시(자유아시아방송, 3.4)
 - 한국에 정착한 탈북 학생들의 작품 전시회가 미국 동부 버지니아에서 열리고 있음.
 - 전시된 작품은 서울 여명학교 탈북 학생들이 미술 심리치료 과정에서 그린 것들로서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들과 경험에 대해서 회화, 도자기, 조각, 사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했음.
 - 미국 제임스 메디슨 대학은 지난 8년 동안 지역학교들과 연계해서 매년 전시회를 열었으며 올해엔 탈북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하기로 했음.
 - 탈북 학생의 작품 전시를 추진한 제임스 메디슨 대학 강신지 교수는 "미술은 사람들이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이야기를 대변해주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탈북 학생들과 미국 학생들이 직접 만나기는 어렵지만 예술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공유하길 바랐다"라고 전했다.

- 캐나다, 지난해 난민 수용 1명뿐(자유아시아방송, 3.4)
 - 캐나다 이민난민국(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은 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해 617명의 난민 신청 탈북자를 심사해 단 한 명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 캐나다 이민난민국의 공보 담당관은 지난해 12월까지 포함된 최신 난민입국자 통계(Claims Referred and Finalized)에 따르면 신청자 중 198명이 난민 인정을 거부당했고, 265명은 이민국에 사유를 알리지 않은 채 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 또한 153명은 신청자 스스로 심사를 철회해 지난해 캐나다 정부의 탈북 난민 수용율은 0퍼센트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 캐나다 정부는 2007년 한 명, 2008년 7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인 후 2009년 64명, 2010년 42명, 2011년 115명, 그리고 2012년에는 222명으로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했다.
 - 2012년 약 80퍼센트로 최고조에 달한 캐나다 정부의 탈북 난민 수용율은 한국에 정착한 후 캐나다에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이른바 '위장탈북자' 단속으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 캐나다 정부는 2012년 12월 새로운 난민수용 규정을 도입하고 난민 심사 기간을 최대 2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반면 '위장탈북자' 단속을 강화했다.
- 탈북청소년, 심신 건강 관리 무료로 받는다 남북하나재단-KMI연구소, 탈북자 종합건강검진 진행(데일리NK, 3.6)
 - 남북하나재단과 KMI한국의학연구소는 5일 '재단-KMI 탈북청소년 건강검진 후원 나눔전달식'을 진행했다.
 - 이번 전달식은 건강검진 전문기관인 KMI한국의학연구소가 2월 한달 전국의 대안교육시설 및 그룹홈 탈북 청소년·교사 129명에게 종합검진 패키지를 무료로 제공한 기념으로 열렸다.
 - 탈북 청소년 종합건강 검진은 올해 처음으로 시도된 것으로 의료 환경이 열악한

탈북청소년들의 건강한 생활과 성장을 돕기 위한 착한 기부의 일환으로 실시됐음.

- KMI 연구소는 향후 탈북 청소년·교사를 대상으로 한 종합검진 결과를 통해 건강 체크 및 심신 건강관리를 진행할 예정임.

■ “영국, 탈북난민 심사 강화…인권단체, 우려 표명”(연합뉴스, 3.7)

- 영국 정부가 위장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탈북자에 대한 자격 심사를 강화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했음.

-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최근 보도에서 영국 정부가 탈북자에 대한 난민 심사를 엄격히 하고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인권단체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음.

- 이번 난민 심사 강화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이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로 위장해 난민 신청을 하는 사례를 막으려는 것임.

- 유럽인권연합(HRNIK), 재영조선인협회 등 영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난민 심사 강화 탓에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탈북자도 생겨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우려를 표했음.

4. 이산가족

- 특이사항 없음

5. 납북자

- 특이동향 없음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스위스, 660만 달러 대북 식량지원(자유아시아방송, 3.3)
 - 국제사회의 올해 첫 대북 식량지원 기부국은 스위스라고 세계식량계획이 밝혔음.
 - 세계식량계획의 실케 버 아시아 담당 대변인은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청(SDC)이 지난달 10일 미화 약 66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다.
 - 버 대변인은 스위스의 기부금으로 분유를 구입해서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약 150만 명을 위한 영양강화식품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스위스 정부의 기부금 660만 달러로는 약 1100톤의 분유를 구입할 수 있음.
 - 스위스가 북한에 제공하는 분유는 우유에서 지방을 분리해서 제거한 뒤 건조시킨 탈지분유로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에서 운영하는 식품가공 공장에서 생산하는 영양식품의 원료로 쓰임.
 - 한편, 스위스 정부는 올해 대북지원사업으로 유엔을 통한 식량지원과 산림농법 전수 그리고 수질 개선을 위한 설비 등 세 분야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 스위스개발협력청은 지난 1995년부터 대북 지원을 시작했으며, 1997년에는 평양에 상주사무소를 개설했고 이후 2002년부터는 스위스 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정부 간 개발협력 지원을 시작했지만 스위스 의회의 요청으로 2011년 말 이후 다시 유엔과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 지원으로 성격을 전환했음.

- WFP '2월 대북 식량 지원 전달보다 31% 감소'(미국의소리, 3.3)
 - 세계식량계획 WFP의 2월 대북 영양 지원이 전달에 비해 31% (31.4%) 줄어들었음.
 - 이 같은 수치는 지난 1월 66만4천 명에게 1천730t의 식량을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31% (31.4%) 줄어든 것이며 1년 전인 지난해 2월 1백55만 명에게 2천213t을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6%가 줄었음.
 - 세계식량계획은 당초 201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어린이와 임산부 등 북한 내 취약계층 약 240만 명에게 영양강화식품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지난해 6월부터 지원 대상을 180만 명으로 축소했음.

8. 북한동향

- 【조선법률가위원회 백서(3.3)】 美 주도하의 유엔인권결의안 채택 및 對北제재 등을 거론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소동과 세계 도처에서 일삼고 있는 고문만행·비법적인 제재책동을
폭로한다'며 '美 인권유린범죄행위 폭로 단죄 및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흐름에 합세할 것'
을 호소(3.3,중앙통신)
- 北 리수용(외무상), 3월 3일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을 통해 유엔의 '북인권결의안'
채택('14.11.18) '무효(증거 허위성 등) 및 유엔 인권이사회의 인권문제 공정성 처리'를 주장
(3.5,중앙통신)
 - * 리수용, 3월 3일 제네바 군축회의 연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면 미국에
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며 미국의 '對北정책 철회' 주장(3.5,중앙방송·중
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시 양로원건설장 현지지도(3.6,중앙통신·중앙방송)
 - 황병서, 최태복, 오수용, 리재일, 조용원, 김여정 등 동행
 - 김정은은 '양로원을 잘 꾸리는 것은 우리 당의 연로자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고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과시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언급.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